

2021. 5. 28. 정부 발표
“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” 분석

2021. 6. 17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



권오훈 변호사

-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
-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
-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
- 서울변호사회 국제위원회
- 과기정통부/NIPA 블록체인 규제개선 자문반
- 스타트업 법률지원단

ohkwon@chakwon.com

02-3495-0957

1. 발표 자료 요약

- 가상자산 현황
 - 특금법 정의: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
 - 높은 변동성으로 현금 및 금융상품으로 인정 안함
 - 사업자: 가상자산거래업자 (거래소) 60여개 사 영업 중 파악
 - FIU 신고 접수: 0개
 - ISMS 인증: 20개
 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: 4개
 - 가입자: 4대 거래소 가입자 중복 포함 581만명으로 파악
 - 거래규모: 평균 일거래 대금 22조원 (4월 평균) 15조원 (5.27 당일)
 - 가격: 김치프리미엄 4.7 20%까지 확대 후 5.27 현재 8.7%

1. 발표 자료 요약

- 정부 대응 요약
 - 투기과열 진정: ICO 금지,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, 매입, 투자 제한
 - 2021년 6월까지 특별단속 시행 중
 - 금융위: 자금세탁
 - 법무부: 거액 사건 직접수사
 - 과기정통부: 보안취약점 점검
 - 기재부, 관세청: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점검
 - 국세청: 고액체납자 강제징수
 - 경찰청: 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
 - 공정위: 불공정약관 직권조사
-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
 - 사업자 신고 의무
-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
 - 가상자산 양도, 대여 소득

1. 발표 자료 요약

- 가상자산 관리 방안
 - 단계적 대응 추진
 - 9.24 이전: 사업자 관리, 불법행위 단속
 - 9.25 이후: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 강화
 - 제도 보완
- 기본 방향
 - 자기책임하에 거래
 - 사업자 관리 강화 / 불법행위 단속 강화
 - 가상자산사업자 내: 거래 투명성 확보 / 고객자산 안전 보관
 - 가상자산사업자 외: 사기,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
 - 블록체인 기술 발전, 산업 육성 지속 추진
 - 가상자산 양도 등 소득 2023년 신고 납부
 - 규제 및 육성 투트랙
 -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: 금융위 주관
 - 블록체인 기술발전 산업육성: 과기정통부 주관

1. 발표 자료 요약

- 9. 24 이전 리스크 관리
 - 신고 관련 컨설팅
 - 과기정통부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
 - 신고접수를 위한 요건
 - 신속신고 심사, 접수
 - 신고 신청 시 신속 접수 추진
 - 신고현황 공시
 - 금융위원회 홈페이지
 - 검거 강화
 - 예치금 횡령,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

1. 발표 자료 요약

- 9. 25 이후 체계적 관리
 -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적용 규정
 - 신고의무
 - FIU 신고 위반 시 징역, 벌금 등
 - 자금세탁방지
 - 고객확인, 의심거래보고, 내부통제 기준마련,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
 -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,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, 다크코인 거래 금지, 미신고사업자와 거래 금지
 - 횡령 방지
 - 예치금 분리관리 의무
 - 해킹 방지
 -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획득 의무

1. 발표 자료 요약

- 9. 25 이후 체계적 관리
 - 제도개선 추진(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)
 -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신설
 -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을 중개 및 알선 행위 금지
 - 사업자의 시세조종 금지 신설
 - 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
 - 가상자산 보관 강화
 -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적용 (70% 이상)

1. 발표 자료 요약

- 불법행위 특별단속
 - 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2021년 9월까지 연장
 - 중점단속 불법행위 유형
 - 가상자산 원화 등 출금 지연, 정지 이후 거래소를 폐쇄하는 기획 파산
→ 특가법 상 사기, 횡령, 배임
 - 상장피를 받거나 가치 없는 가상자산 발행, 판매, 상장
→ 특가법상 배임 및 사기, 유사수신행위
 - 데이터상 허위로 자산 입력, 기망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 편취
→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
 - 해킹 및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
→ 정통망법 위반, 횡령 배임
 - 가상자산 투자 빙자, 피해자의 자금 수신, 편취
→ 특가법 상 사기,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
 -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가장한 피싱, 스미싱
→ 정통망법 위반

1. 발표 자료 요약

-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 추진
 - 블록체인 대표 사례 발굴
 - 집중 추진분야 선정, 확산사업 대형화 추진 ('22~)
 -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지원 추진 ('22~)
 - 블록체인 기업 육성
 - 중소, 스타트업 기업 지원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('22~)
 - 해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, 검증 지원 ('22~)
 - 선제적 규제 발굴
 - 자문반 운영,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논의 (5월~)
 - 분산 ID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, 전자서명 등 후속 개선 논의 추진
 - 차세대 기반기술,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
 - 핵심 기반기술 개발 추진 ('21~'25) 총 1,133억원 투자 (컨센서스, 스마트컨트랙트 보안, 신원관리, 데이터 관리)
 - AI, IOT, 블록체인 융합 ('22~)

1. 발표 자료 요약

- 개정 세법 과세 이행
 - 2022. 1. 1. 이후 가상자산 양도, 대여 발생 소득
 - 2023. 5.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
 - 1년 간의 이익, 손실 통산,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
 - 20% 분리 과세
 - 250만원 기본 공제
 - 2022. 1. 1.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2021. 12. 31.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의제
 - 비거주자, 외국법인은 2022. 1. 1. 이후부터 발생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

1. 발표 자료 요약

- 2021. 6. 17. 금융위 발표 시행령 개정안
 - 가상자산사업자 조치 추가
 -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 (사전자기록등위작죄)
 -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함
 -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함
 - 금융회사등 모든 고객 위험 평가 필요
 - 고객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확인해야 함

▣ 일반계열사 판단기준 요약

요건	판단기준
지분율 요건	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%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
지배력(영향력)요건 1 ~4 +경영에 지배적영향력 행사	1. 동일인이 임원의 50/100이상 선임 2.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, 신규사업투자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3.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회사간 임원겸임, 인사교류 4.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·자산·상품·용역거래, 채무보증·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

2. 논의점

-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관련
 - 가상자산사업자 정부 컨설팅에 대한 실효성 지켜볼 필요가 있음
 - FIU 신고 시 구체적인 양식에 대한 확인 필요
 - 거래소 취급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
 - 거래소 상장이 까다로워질 것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음
- 가상자산 정부 단속
 - 9월까지 집중 단속이 예상됨
- 향후 규제 전망
 - 향후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주의 필요
 - 향후 거래소 임직원의 자전 거래 주의 필요

감사합니다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